

농어촌 기본소득은 도농간 격차해소와 지방주도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.

< 보도내용 >

- ☐ 2026.9.8.(화) 세계일보는 「‘성장’ 미래기금에 ‘복지’ 농어촌 기본소득 논란」 제하의 기사에서
 - “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속적으로 재원이 들어가는 복지사업에 가까우므로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 및 재원 구조에 맞지 않는다.”고 하면서,
 - “일시적 재원으로 언제든 소진될 수 있는 기금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담는 것은 운영원리와 맞지 않고, 기금으로 편성될 경우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%를 국회 변경안 제출 없이 늘릴 수 있어 정부 재량이 커지는 점도 문제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입장 >

① 농어촌 기본소득은 사업 취지와 성격이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목적과 부합하여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·편성했습니다.

- ☐ 미래대응기금은 ①청년, ②성장동력, ③지방, ④교육·인재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각각의 계정을 두었으며, 이 중 지방계정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 등으로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, 지방주도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- 반도체 등 산업 성장의 과실이 특정 지역과 기업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매개로 모든 지역·계층으로 확산하고,
 - 도시와 농어촌의 경제 격차 완화, 인구소멸지역의 인구 유입,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선순환 구축을 도모하여 지역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입니다.
- 아울러,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도입된 이후 대상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, 소비도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*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포함하였습니다.

* '26년 본예산 10개 지역 평균 인구증가율 +5%, 신규 가맹점 +15% 확대

② 향후 미래대응기금 고갈 가능성 등과 상관없이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.

- 올해에도 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, 내년에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하면서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소요만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했습니다.
- 추가적으로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급증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·운용하여, 농어촌 기본소득 등 농어업 분야 장래 소요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 확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.
- 이에 따라, 내년 예산안에 미래기금으로 전출·적립하는 농어촌특별세 규모는 총 3.8조원(= 사업 전출 1.2조원 + 적립금 2.5조원)입니다.

③ 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 증가 등 예상하지 못한 추가 소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형태로 반영했습니다.

- 대상지역의 전입·전출 인구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항으로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구체적인 소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.
- 기금사업으로 편성하는 경우, 연도 중 시시각각 변동하는 인구에 따른 추가 소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
**4]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회와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
편성하고, 기금변경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.**

- 농어촌 기본소득의 대상 지역·개수, 지원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, 국회의 사전 심의·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.
-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, 다른 기금과 달리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는 등 보다 강화된 사후 통제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	책임자	과 장	류재현 (044-214-2750)
		담당자	사무관	박근형 (rmsgudkorea@korea.kr)

